

文 “5·18 강령서 왜 빼려 했나”…安 “실무 논의서 잘못 바로잡아”



손 맞잡은 대선주자 5인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공동 주최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주자 “農心 잡아라”…농업 공약 발표

농가소득 보장·김영란법 개정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날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농가소득 보장과 공공급식 전면 확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귀농인 지원, 공공병원 설립,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과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 시행, 농생명산업 활성화 등 7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가 바로 장기 식량 수급계획을 세우는 컨트롤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식량 주권확보를 통해 농정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주요 식량 작물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 쌀값 안정 조치, 농가소득 감소분 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김영란법을 개정해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금을 쌀 이외 다른 작물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한민국 농업이 살 길은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쌀 직불금을 ha당 4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 기본소득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은 13일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에서 이념·정책·공약·검증 등에 있어 쟁점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과거 정치경력과 이념 성향을 놓고 가시가 돌진 설전이 오가면서 후보들 사이에는 냉기류가 흘렀고, 토론 도중 “과편지하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는 일도 벌어졌다.

◇“安, 호남 2중대나” 공격, ‘적폐 지지’ 논쟁도=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당이 30명 의석(실제 의석 40석)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 제가 보기에는 호남 1중대가 민주당이고 2중대가 국민의당”이라고 공격했다.

안 후보는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50석이 넘는 의석으로 국정운영을 잘했나”라고 반박하면서 “저는 돌파력을 이미 보여드렸고, 국민이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가 안 후보를 향해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자 안 후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저는 연대 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며 “북한에서 촛불집회를 우호적으로 보도하면 촛불집회도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왜 “친북좌파” 집중포화=우선 홍

安 “4차산업혁명 기다림 어땠나”

후보가 문 후보를 겨냥, “좌파 정치인들의 반기업 정서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문 후보가 “선거 때마다 차떼기로 정치자금 받고 국정농단사태에서도 재벌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 반기업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홍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돈을 받지 않았나”라고 응수했다. 문 후보는 “차떼기에 비하겠나. 차떼기 정당 대표도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특히 유 후보가 자신을 비판하자 “옛날에 이정의 후보를 보는 기분이다. 지금의 주적은 문 후보니 문 후보에게 공격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문 후보가 “제가 왜 주적이나. 금수저가 주적 아니냐”라고 묻자 홍 후보는 “진북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선되면 가장 먼저 북한 김정일을 찾아간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4차산업 공방=안철수-문재인 후보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관해 서로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안 후보가 “다음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여러가지 시도를 다양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디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과학기술과 4차산업혁명은 안 후보가 전문가인데”라며 한차례 답변을 미뤘다가 안 후보가 거듭 답변

洪 “30석으로 어떻게 국정운영”

을 촉구하자 “기초과학연구가 긴 호흡으로 가야하고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것을 기다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싸늘한 목소리로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박연차 게이트’ 놓고 충돌=홍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의) 640만 달러 뇌물을 수수할 때 몰랐나”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지금 노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며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한다”고 맞섰다. 홍 후보가 다시 “(뇌물 수수는) 이미 중수부에서 발표한 거다”라며 “알았나, 몰랐나”라고 추궁하자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어 “세월호 1155억 원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하면서 (유방언의 세모 그룹이) 살아났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그것도 책임지셔야 한다”며 “(법원이) 탕감했지?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느냐”고 반박했다.

◇중세 문제=홍 후보를 제외하면 대체로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유승민 후보는 “소득이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고소득자에

沈 “文 공약에 증세이야기 없다”

대한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도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심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이번 공약에 증세 이야기는 아예 안 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문 후보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또 “우선 부자증세를 하고 고소득자, 그다음에 고액 상속·증여 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18 강령 논란=문재인 후보는 “안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할 때 5·18 정신과 6·15선언을 당 강령에서 삭제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 실무 논의 상황에서 잘못된 발언이 나와 바로잡았다. 지금 국민의당 강령을 보면 모두 명시 돼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재차 “(민주당 강령 삭제 건은) 비판받아 철회했죠”라고 꼬집자 안 후보는 “잘못 알려진 흑색선전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 포함에 동의하느냐”는 문 후보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확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안철수, 반값 등록금 반대” 공세

安 “소의 계층부터 추진” 해명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이번에는 대학 등록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는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겨냥해 “안 후보는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대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선대위 ‘새로운 교육정책위원회’ 소속 도종환, 유은혜, 오영훈,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의 주최로 열린 대학교육비 토론회에서 안 후보 측이 반값 등록금에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전날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담해 달라는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신 안 후보 측은 “소의·취약 계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예산 등 무리가 있으며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을 막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 장학금을 소외·취약 계층에게 대폭 확대하는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 후보 측에서는 이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절반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며 안 후보 측이 등록금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인 찾아간 손학규 “安으로 오시죠”

金 ‘반문’ 입장만 재확인

손학규 국민의당 선대위 상임선대위 원장이 13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만나 안철수 후보 지원을 요청해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안 후보 지원 의사를 선뜻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내가 탈당한 것만으로도 ‘문재인은 안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국민의당에서는 결국 김 전 대표가 어떻게든 안철수 후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 이후 이번 대선과 거리를 두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메이커’ 역할론도 일축하고 있다. 그는 조만간 독일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